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 044-203-6806/6809 대학평가과장 박대립, 사무관 어효진, 사무관 김홍오
 [자료문의] ☎ 044-203-6271 대학장학과장 전진석, 사무관 최경
 ☎ 044-203-6918 대학정책과장 신문규, 서기관 이지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 노력
- 제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 지원
-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

□ 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8.31),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8.26) 심의

□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 입학가능자원 : ‘13학년도 약 56만명 → ‘17학년도 약 52만명 → ‘20학년도 약 47만명 → ‘23학년도 약 40만명

-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

※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 교육대학, 교원대학교는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시행

< 이번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다.

※ (기존 정책) 학생 정원에 대한 별도 방안 부재 → (새로운 정책)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감축 추진

□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 (기존 정책) 하위 15%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중심의 소극적 방식 → (새로운 정책) 제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 지원

□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 (기존 정책) 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 등 양적 접근 → (새로운 정책) 양적 접근 외에 질적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은 E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일반대 그룹 1 점수의 경우, 1단계 평가 점수(총점 6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별도 조치	평가제외
학교 수	일반	34교	56교	36교	26교	6교	5교	29교
	전문	14교	26교	58교	27교	7교	3교	2교

*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 평균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 조치

< 대학 구조개혁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감축 비율 권고 등 합리적 정원감축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다.

< 정원감축 비율 >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평가제외
감축 비율	일반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		3%	5%	7%	10%	5%

-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으로 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감축은 곤란하나,

*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14.4, 김희정 의원)

-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간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율적 정원감축에 나선 대학은 노력한 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 반대로 정원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정원감축 철회,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 조성 등 대학사회 전반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되었다.

-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이번 정원감축 권고로 기존의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상당 부분 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일반대 77.4%, 전문대 73.4%) 되었으나,
 -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일반대 51.4%, 전문대 59.6%)하여 수도권,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되었다.
 - ※ 입학정원 비율('13학년도 기준) : 수도권대학 35.9%, 지방대학 64.1%
 - 이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 ※ 평가참여 대학 중 지방대 비율 : 일반대 63.8%, 전문대 68.1%
 - 그룹 1 중 지방대 비율 : 일반대 63.5%, 전문대 72.4%
 - 비록 지방에 소재하였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
-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으로,
 - 자율적 감축량을 함께 고려한 총 감축량이 1주기('14~'17학년도) 목표인 4만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천여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량이 자율 감축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18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 반대로 자율 감축량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만큼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 ※ 다만 1) 사업의 주 수혜대상이 외부기관이거나 사업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개인 연수 등에 사용될 경우, 2)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제한 완화 가능
 - 특히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포함한 질적 변화를 도모한다.
-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한다.

< 유형별 컨설팅 방안(예시) >

분석 유형	세부내용	컨설팅 주안점
사회 수요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 필요	백화점식 학과 나열 →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등 각 계열별로 소규모 학과 다수를 운영	학과 간 통합 및 융합을 통한 강점 분야 집중 육성
교육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강점분야 집중 부족 → 특성화 학과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일부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으나, 그 외 경쟁력이 부족한 학과 운영	강점 분야 위주 육성
	교육여건, 충원율, 취업률 등이 비교적 양호하며, 나름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교육운영 시스템 상 개선 필요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 제한의 범위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한다.

< '16년 그룹 2 재정지원 제한 범위 >

등급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I 유형	II 유형	일반	든든	
D 등급	80점 이상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	-
	80점 미만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E 등급	전면 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 전문대학의 경우, D 등급을 78점 이상과 78점 미만으로 구분

- 또한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도 미적용

- 반면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하여 향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D 등급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신규, 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든든) 50% 제한

3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사업) 신설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개선(6개→35개 분류)을 바탕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 산학협력을 통해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의 확대를 지원한다.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채용약정 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등

-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지역학, 인문학 기반 융합 전공 등 인문대학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 창조경제 및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로서 인문학을 진흥하여 융합학문 시대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국가인문역량 확대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현재 교문위 계류 중)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 재교육·계속교육 까지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여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한다.

-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여
 - 대학 하나,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 구조개혁 추진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을 경우,
 -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미충원이 발생하여 교육의 질 저하 및 경영상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 ※ '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 차지
 - 이 경우, 해당 대학에 진학한 학생 및 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과 연계된 지역사회, 산업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져
 -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 되는 위기가 우려되었다.
- 또한 학령인구가 향후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 ※ '13학년도 대비 '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각 대학은 매년 신입생을 몇 명이나 유치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무관한 소모적인 학생유치 경쟁에 노출되어
 - ※ 우리나라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의 경우, 캠퍼스 도심 이전, 등록금 삭감, 잦은 학사과정 개편, 매력적인 학과명 개설 등 학생유치 경쟁이 나타남
-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학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 반면, 대학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 대학의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어,
 -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부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봉사 등 다양한 측면의 특성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적 토대 및 창조적 발전 기반으로써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

- 교양·기초교육과 인문학적 토대를 강화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과 융·복합 교육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다.
-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여 고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한다.

< 수험생·학부모 등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2016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붙임 :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조만간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대학에 안내 하는 한편,

-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할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컨설팅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 없이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약 4만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이루어 졌으나,

*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

-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2주기, 3주기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곤란하여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4만명(‘14~‘16년) → 5만명(‘17~‘19년) → 7만명(‘20~‘22년)

- 이에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입법 노력을 통해 대학구조 개혁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으로

-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며

-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2.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3.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1.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전반은 **교육부 대학평가과 어효진 사무관**, **김홍오 사무관**(☎044-203-6806/6809), 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은 **교육부 대학장학과 최경 사무관**(☎044-203-6271), 3.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이지현 서기관**(☎044-203-69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 (131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협성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 (102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구분	학 교 명
	<p>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p>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 상기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부 가능하며, 그 외 대학에 대한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개별 대학의 안내 참고

붙임2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16개)	일반 50% (10)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일반 든든 100% (6)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일반 50% (14)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일반 든든 100% (7)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3

'16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 (186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구분	학 교 명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 (130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해대학,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승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